

【특 집】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불교

이 경 민*

차 례

- I. 서론
- II. 종교국가 만주국
- III. 만주국의 종교정책
- IV. 만주국과 불교
- 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종교국가를 표방하고 있던 만주국의 본 모습을 조명해보고 또한 식민지 국가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불교정책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만주국은 1931년 일본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지역을 점령한 후,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직후인 8월 18일 황제 부의의 퇴위와 함께 멸망하기까지 약 14년 동안 만주와 동북지역을 통치하였다.

이러한 만주국은 ‘왕도’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예교-공교를 국교로 삼아 “공인교 국가 내지 정교합일”의 종교국가를 표방하면서 ‘신교의 자유’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었지만, 실상은 일제의 종교정책의 본질적 이면성—‘이용’과 ‘탄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만주국은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교부의 예교사나 민생부의 사회사, 치안부 경무사 특수과 등의 정부 조직 뿐만 아니라, 흥안사, 협화회 등을 동원하여 이른바 “일만협치(日滿協治)”,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만주국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종교를 이용하였다.

* 동아대학교 중국어학과 시간강사.

종교는 사회적 의식형태의 하나로 혼란기였던 당시 민중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 식민지 국가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만주국은 일본에 의해 실질적 통제를 받았으며 또한 일본의 강압적 식민지 정책에서 종교는 그들의 중요한 민중 통제의 수단이었다.

주제어: 만주국, 종교정책, 예교 - 공교, 오족협화회, 만주국 불교

I. 서론

만주국은 1931년 일본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지역을 점령한 후, 1932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부의(溥儀, 청 선통제)를 황제로 내세워 설립된 국가로, 일본 제국에 철저히 종속되었던 탓에 괴뢰국가, 또는 위만주국(偽滿洲國)으로 불린다.¹⁾ 만주국은 지금의 중국 창춘(長春)의 지명을 신징(新京)으로 개명하여 수도로 정하고서 오족협화(五族協和)의 왕도낙토(王道樂土)를 이념으로 수립 된 이후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직후인 8월 18일 부의의 퇴위와 함께 멸망까지 약 14년 동안 만주와 동북지역을 통치하였다.

‘만주사변’으로 일컬어지는 1931년의 ‘9.18 사변’은 일본 관동군이 심양부군의 남만주철도 구간을 폭파했던 ‘유조호 사건’을 구실로 중국 국민 혁명군이 주둔하고 있던 심양 북대영을 습격한 사건을 말한다. 사실 이 ‘9.18’ 만주사변은 일본의 대륙침략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당시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빈사상태에까지 이르렀던 일본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탄생된 만주국은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전

1) 1933년 8월 8일 日本閣議에서 <滿洲國指導方針要綱>를 결정,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거하여 만주국을 조종하였던 것과 부의 황제를 꼭두각시 체제로 만주국을 조종하였기 때문에 괴뢰정권이라고 언급하였던 것이다. 특히 <요강>의 제 3조에서는 “三, 만주국 지도에 대한 현행 체제 아래에서 관동군 사령관 겸 만주국 주재 대사의 내부적 통합관리 아래, 중요한 내용은 일본인 관리의 실질적 지도를 받는다. 일본인 관리는 만주국 운영의 핵심이어야 하며……(三、對於滿洲國の指導、在現行體制下、在關東軍司令官兼駐滿帝國大師の内部統轄下、主要通過日本官吏進行實質性的指導。日本官吏應該是滿洲國運營的核心……)”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형적인 신식민지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만주국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만주학회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만주국의 정치, 경제, 문학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관련 연구를 망라하는 다방면에서 다각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만주라는 지역은 우리민족에게는 특수한 역사적 공간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에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만주국과 만주국 시기의 종교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오질 못했던 것 같다.

만주국 시기의 종교에 관한 국내의 연구에서 대표적인 논문은 「만주국의 정교정책과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최봉룡, 2004, 만주연구 1), 「만주국의 종교 정책과 재만 한인의 신종교 활동」(최봉룡, 종교연구 2004, 36), 「만주국의 종교정책에 대한 연구 - 국가종교와 국가이념의 변형을 중심으로 -」(최봉룡, 2010, 숭실사학 24) 등의 만주지역의 재만 한인(조선인)의 종교 활동 관련 논문과 「만주국과 천주교회」(신의식, 2016, 교회사 연구 49), 「1930년대 민주지역 대종교 재건과 민족운동」(이숙화, 2017, 고조선단군학 37), 「만주 한인의 종교적 민족운동」(조재복, 2000, 역사와 담론 28) 등 개별종교와 민족운동을 결합시킨 논문들이 있다. 특히 이러한 논문들에서는 근대 한국사에서 만주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한인들의 종교 활동과 이와 결부되어 있는 독립운동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만주 관련 논문 편수에 비해 만주국 시기의 종교관련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주국의 성립에서 멸망에 이르는 14년의 시간 동안 만주국의 전반적인 종교 현황과 종교 정책을 살펴보고, 특히 그 중에서 이러한 만주국의 종교 중에서 불교의 위상과 그 역할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만주국은 ‘왕도’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예교·孔敎를 국교로 삼았던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공인교 국가 내지 정교합일’²⁾의 종교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교는 사회적 의식형태의 하나로, 특히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

2) 최봉룡, 2010, 「만주국의 종교정책에 대한 연구 - 국가종교와 국가이념의 변형을 중심으로」, 『숭실사학』 24, 257~304쪽.

의 의지처가 된다는 점에서 당시 민중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식민지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만주국은 일본에 의해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았으며, 또한 일본의 강압적 식민지 정책에서 종교는 그들의 중요한 도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국(시기)이 종교정책에 대한 고찰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종교국가 만주국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만주국은 그 국가의 건국과 함께 명분에 입각한 이념을 제시하였는데, 국민정신 함양을 위해 이른바 ‘왕도(王道)’를 국시로 삼고 ‘예교(禮敎)－공교(孔敎)’를 국교로 내세웠다. 유교문화는 중국의 전통적 봉건 문화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종교적 범주에 넣기가 어렵지만, 농후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만주국은 건국 선언에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근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중국대륙에서 5.4 운동세대에 의해 맹렬한 비판을 받았던 유교(예교)가 만주국에서는 국교 수준의 종교가 되어 정부정책을 새겨 나갔다”³⁾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종교로서의 예교·공교는 만주국 시기에 전국적 규모로 시행되었던 문묘제사(文廟祭祀)의 형태로 부활하게 되었다. 만주국은 전국 88개소의 문묘를 세우고 국제(國際)로 봄과 가을, 년 2회에 제사의식을 거행했는데, 이를 ‘춘정제공(春丁祭孔)’, ‘추정제공(秋丁祭孔)’이라고 불렀다. 이 제사에는 중앙에서는 국무총리가, 각 지방에서는 성장과 시장, 현장 등 최고 책임자가 참여하여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집정으로 임명된 부의는 <만주국집정선언(滿洲國執政宣言)>에서 다음과 말하고 있다.

3) 한석정·임성모, 2001, 『생방향으로서의 국가와 문화』, 『한국사회학』 35(3), 169~195쪽.

인류는 반드시 도덕을 무겁게 해야 하느니, 그러지 않고 인종간의 다른 견해가 있으면 곧 사람을 억누르고 자기를 세우게 되며 도덕은 가벼워지리라. 인류는 반드시 인애를 무겁게 해야 하느니, 그러지 않고 국가 간의 다툼이 있으면 곧 사람을 손해주고 자기를 이롭게 하여 인애는 가벼워지니라. 지금 우리 만주국을 세워 도덕과 인애를 위주로 하면서 인종 간의 차별과 국가 간의 다툼을 제거하여 왕도 낙토의 여러 사실을 볼 수 있으니, 무릇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위해 매진해 나가길 희망한다.⁴⁾

만주국은 건국시기부터 줄곧 “예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예교-공교를 단순한 개인적인 종교나 신앙의 범주를 넘어서는 범국민적이고 범국가적인 국민윤리 규범으로 제정하여 놓았다. 그래서 유교의 중요한 도덕 덕목인 인의와 효제의 미덕을 선양하기 위해 효자나 효부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본래 “왕도”는 고대 중국인의 이상인 공정하고 도덕적인 지배자를 의미하며, 정치 이념으로써의 유교(예교)에 의한 지배의 본질로 이해되어 진다. 이러한 동양적 전통에서 왕도정치는 패도정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패도가 무력을 동원하여 통치자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반해 왕도정치는 통치자가 덕으로 정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만주국의 <건국선언>에서는 신생 국가로서의 만주국은 “왕도주의를 실행하여 반드시 영토 내의 모든 민족이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누리며, 동아시아의 영구적인 광영을 지켜 나감으로써 세계정치의 모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⁵⁾라고 왕도주의를 건국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주국에서의 “왕도”는 반서양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만주국은 “서양을 패도의 세계로 규탄하고 왕도를 이상적 통

4) 溥儀, <滿洲國執政宣言>: “人類必重道德, 然有種族之見, 則抑人揚己, 而道德薄矣, 人類必重仁愛, 然有國際之爭, 則損人利己, 而仁愛薄矣, 今立吾國, 以道德仁愛為主, 除去種族之見, 國際之爭, 王道樂土, 當可見諸事實, 凡吾國人, 望共邁之.” 偽滿時期資料重刊委員會編, 1990, <偽滿洲國政府公報> 第一冊(北京, 新華書店), <滿洲國政府公報> 第一號(大同元年四月一日), 4쪽.

5) <滿洲國建國宣言>: “實行王道主義, 必使境內一切民族, 熙熙皞皞, 如登春臺, 保東亞永久之光榮爲世界政治之模型.” <偽滿洲國政府公報> 第一冊(北京, 新華書店, 1990), <滿洲國政府公報> 第一號(大同元年四月一日), 1쪽.

치로 내세웠”⁶⁾던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건국선언>에서는 ‘동아시아의 영구적 광영’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동아시아적 전통에 기반 한 유교(예교)를 부활시킴으로써 수구적 보수 세력을 규합하여 자신들의 지지 세력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노렸던 것이다. “왕도(王道), 그리고 이와 연결된 낙토(樂土)와 대동(大同)의 개념은 만주국에서 아시아 문명의 상징이 되었고, 이 개념들과 만주국 황제는 서로 다른 집단들을 결합하는 사상적 연계의 중심점이 되었으며, 이들 집단은 선택에서이든, 기회주의에서이든, 필요성에서이든 새 만주국 정권을 지지하게”⁷⁾ 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당시 동북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던 정효서(鄭孝胥), 나진옥(羅振玉), 희흠(熙洽) 등은 모두 청나라 시절 관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고를 희망하였으며, 이후 이들은 만주국의 주요 직책을 맡기도 했는데, 정효서의 경우 국무총리를 지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유교의 중요한 덕목인 ‘효’와 ‘충’, ‘삼강오륜’을 통해 유교적 위계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식민지 지배체제를 유지하기에 더욱 용이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리는 국민의 절대다수인 중국인뿐만 아니라 유교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다른 민족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것이었기에 국민 통합의 가장 좋은 사상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신생 독립국가로써의 만주국은 기본적으로 근대국가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한편으로 종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양적 전통의 “왕도정치”를 실현하여 “낙토”를 건설함으로써 이상적 국가(사회)인 “대동” 사회를 목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왕도주의는 태평양 전쟁의 발발과 함께 만주국도 이른바 “전시 체제”로 전환되면서 일제의 종교 간섭과 탄압이 강화되면서 일본의 “황도주의”로 전락하게 되었고, 예교 - 공교는 철저

6) 한석정·임성모, 2001, 『쌍방향으로서의 국가와 문화』, 『한국사회학』 35(3), 169~195쪽 참고.

7) 프라센지트 두아라(Prasenjit Duara), 2005, 『제국주의와 민족국가: 일본과 만주국』, 『만주연구』 2, 29~45쪽.

하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논리의 선전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Ⅲ. 만주국의 종교정책

1932년 3월 9일 만주국의 ‘집정’으로 취임한 부의는 바로 그 다음날 신만주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정부조직법’과 ‘인권보장조례’를 공포하였다. 총 12조로 구성된 ‘인권보장조례’의 3조에서는 “만주국 인민은 종족, 종교의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국가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함으로써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만주국의 종교정책은 타카기 쇼오 노는 스케(高木翔之助)의 《만몽 독립건국론(滿蒙獨立建國論)》에 잘 나타나 있다.

“레닌에 의해 창도되고 지금도 신교 금지하는 소비에트 연방을 제외하고 현대국가는 모두 신교의 자유이다. 만주공화국은 여하튼 이런 근대국가로써 생탄하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 각 개인은 그 욕망에 따라 종교를 신앙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 국적의 여하를 막론하고 종교의 사도로써 혹은 신분의 이름으로 혹은 전당의 그림자에 숨어서 민심을 미혹하거나 또는 치안을 교란하면서 건설의 진군을 저해하는 언동이 있는 도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철추를 내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오인은 특히 이 점에 대해 건국의 대업을 이끄는 당사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⁸⁾

“일제가 만주국 시기에 실시한 종교정책의 본질적인 양면성－한편으로 ‘신교의 자유’라는 간판을 내걸고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교회와 종교인)의 순응과 복종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혹은 종교의 이름으로)의 반항은 ‘쇠뿔치’로 때리는 ‘통제’ - ‘압제’ - ‘탄압’ 정책을 뜻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용’정책의

8) 高木翔之助 著, 소화6년(1931), 《滿蒙獨立建國論》, 동경, 국민외교협회 발행, 45쪽.
앞의 책에서 재인용.

궁극적인 목적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통제’에 있다고 한다면 그 ‘통제’정책은, 곧 ‘이용’을 위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⁹⁾

비록 만주국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는 했지만, 모든 종교에 대해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불교와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등을 제외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와 일부의 종교 유사 단체들은 사교(邪敎)라고 규정하고 통제를 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만주국은 건국과 동시에 각 종교와 종교단체, 종교 유사단체들에 대한 통제 방법을 고심하였다. 특히 “일본의 대본교(大本敎)나 조선의 보천교, 백백교 등과 관련 소식이 전해졌던 시기에 만주국의 문교부 예교사는 ‘사교박멸(邪敎撲滅)’을 위해 종교 통제법을 제정하고자 사전 작업으로 사교에 대해 조사를 실시”¹⁰⁾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만주국은 표면적으로는 종교 신앙의 자유와 전도를 인정해 주고 있었지만, 실상은 문교부의 예교사나 민생부의 사회사, 심지어는 치안부 경무사 특무과, 흥안사, 협화회 등을 동원하여 통제하고 일만협치(日滿協治),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만주국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만주국의 종교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첫째, 종교정책 담당 행정기관의 법령 제정을 통한 기본 자료의 수집과 통제, 둘째 경찰력을 동원한 감시체제의 형성, 셋째 종교협회(총회) 등의 조직을 통한 선전도구화라는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종교관리 기관과 법령의 제정

만주국 초기에 종교업무를 담당했던 기구는 “문교부” 산하의 “예교사(禮敎司)”였다. 만주국 건국 초기의 문교부 산하에는 총무사(總務司), 학무사(學務

9) 최봉룡, 2004, 「‘만주국’의 종교 정책과 재만 한인의 신종교 활동」, 『종교연구』 36, 339~371쪽.

10) 고병철, 2007, 「만주국의 ‘황도낙도’ 구상과 종교」, 『한국민족사 연구』 50, 257~288쪽.

司), 예교사의 3사가 있었는데 이 삼사에서 각각 각종 교육, 종교관리, 교화 통치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예교사 산하에는 ‘사회교육과’와 ‘종교과’를 두고서, 사회교육과에서는 국민 사상교육, 성인교육, 도서관 및 박물관 관련 업무, 수양단체 및 교화단체 관련 업무, 예속과 대중 오락시설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종교과에서는 종교 및 종교단체 관련 업무와 승려, 도사와 전도사 등의 관리 업무, 그리고 사찰과 사찰 소유 재산 관리 업무, 사적 및 명승지 보존 관리 업무 등을 맡았다. 전체 문교부의 배정인원은 장관 1명과 총무사 소속 59명, 교무사 소속 49명, 예교사 소속 24명, 총 134명이었다.¹¹⁾

그러다가 1937년 5월 일제는 <만주국정부행정조직개혁대강(滿洲國政府行政組織改革大綱)>을 발표하여 그해 7월 1일 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만주지역 통치의 “간소화”, “일원화”, 그리고 ‘능률화’를 통한 식민지 통치의 강화였다. 이 과정에서 종교정책을 담당하고 있던 “문교부”가 폐지되고, 민생부(民生部)가 신설되었으며, 종교 관련 업무는 민생부 산하의 “후생사(厚生司)”로 이관되었다. 후생사에서는 종교 및 종교단체 관련 업무, 종교 포교사 관련 업무, 사찰 관리업무 등을 전담하였다.

1943년 3월, 만주국은 행정기구를 전시체제로 개편하면서 민생부를 폐지하고 다시 “문교부”가 부활시키는 한편, 이전의 총무사, 학무사, 예교사 이외에도 감찰부와 편심부(編審部)를 증설하였는데, 종교업무는 예교사와 종무관이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예교사에서는 주로 종교단체 및 교화단체의 회의를 주관하였고, 종무관은 주로 종교단체의 자료 조사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행정기관에서는 주로 법령을 통하여 각 종교단체의 기본상황들을 조사하고 관리, 통제하였다.

만주국 시기의 종교정책 기관에 있어서 눈여겨보아야 할 조직은 바로 “만주국협화회(滿洲國協和會)”라는 조직이다. “만주국협화회”는 만주국 건국 초기부터 “미래의 영도자”로 기대를 받으면서 일당집권의 관민(官民) 일체화

11) 武强 主編, 1989, 《東北淪陷十四年教育史料》(第一輯), 吉林教育出版社, 85~90쪽.

를 추진했던 조직으로, 그 회장을 만주국의 국무총리 대신이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준국가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관동군의 “만주국”에 대한 통치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종교 정책에 있어서는 시종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만주국협화회의 전신은 이른바 “협화당”으로, 건립 초기부터 각 종교 교파의 총회를 협화당 아래에 두고자 하면서 종교 및 단체에 대한 교화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각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1933년 3월 “협화회”가 정식으로 성립되고 난 후 <만주국협화회 업무요강[滿洲國協和會會務要綱]>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건국 정신의 실천”, “국민의 교화”, “반국가 사상 및 관련 운동의 배척” 등의 내용을 협화회의의 주요한 사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협화회는 1934년 9월과 1936년 7월 두 차례의 조직 개편을 통해 “건국정신 유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국민을 훈련시키며 이상적이고 유일한 사상과 교화와 정치를 실천하는 단체”이자 “정부의 정신적 모체”¹²⁾라고 자신들의 조직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이 만주국의 ‘협화회’에 대해, 두아라 교수는 “협화회는 대다수인 중국인과 그 외 인구의 20%를 차지한 몽골, 만주, 이슬람 회족,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러시아인 등 아시아 민족의 공동체와 전통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특수성을 찾았고, 이는 종종 몽골족 라마승 만주와 다우르족 사만, 이슬람 아흥(ahong), 불교 승려, 유학 도덕가 등 이들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을 후원하게 된다. 협화회의의 조직단위를 만주 촌락, 회족 사원, 혹은 바오지아(保甲)로 알려진 중국인 공동체의 자기 감시체계에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권력 구조를 활용하여 지방사회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였다.”¹³⁾ 라고 하였다.

12) 偽滿洲帝國協和會編, 1940, 《滿洲帝國協和會組織沿革史》, 東京, 不二出版社, 178쪽.

13) 프라센지트 두아라(Prasenjit Duara), 2005, 「제국주의와 민족국가: 일본과 만주국」, 『만주연구』 2, 29~45쪽.

年份	分会数(所)	会员数(人)	会员数/分会数
1934年	900	300000	333.3
1935年	1325	330000	249.1
1936年	1801	370000	205.4
1937年	2607	814897	312.6
1938年	3091	1093634	353.8
1938年	3510	1491347	424.9
1940年	3586	1771852	494.1
1941年	4194	2789962	665.2
1942年	4425	3208223	725.0
1943年	5140	4116341	800.8
1944年	5185	4285414	826.5

<협화회 역대 조직 현황 통계표>¹⁴⁾

협화회는 만주정권이 고안해 낸 정권을 지탱하는 두 가지 이념 - ‘오족협화(五族協和)’와 ‘왕도낙토(王道樂土)’의 관리, 유지를 위한 ‘정당’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층 조직에서부터 만주의 민중을 철저히 감시하는데 동원되었던 조직이었다.

만주국은 건국 초기부터 종교 통제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만주국 통치자들은 이른바 ‘건국정신’ 함양을 위키고 대중들을 교화(敎化)하는 데 종교를 이용하였다. 이는 당시 만주국 빈강성(濱江省) 교육청 예교과 과장이었던 소정면(蘇正冕)은 “종교의 특징은 바로 인민들의 신심을 이용하여 그들을 구속하고 구슬려 통제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¹⁵⁾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교과’는 종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부서였기에 이를 통해 만주국이 종교를 이용

14) 王承禮·孫繼武 主編, 1001, 《中國東北淪陷十四年史綱要》,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77쪽.
 閔超, 《東北淪陷時期宗教狀況與教化統治研究》(동북사범대학 2009년 박사학위 논문, 54쪽)에서 재인용.
 15) 偽滿洲國國務院文教部編, 1934, 《滿洲國文教年鑒》(長春) 243쪽; “宗教之特點, 即在能利用人民之迷信心, 以便宜籠絡羈繫, 使之就范也。”

해 민심을 미혹시키고 마비시켜 통제에 복종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을 통한 통제는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종교단체의 소유 재산에 대한 통제, 즉 재정 통제이고, 둘째는 종교 인력에 대한 통제이며, 셋째는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이다.

1932년 12월 24일 만주국은 처음으로 법으로 종교를 감독하기 위한 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바로 몽고족 거주 지역이었던 흥안(興安) 총독부에서 흥안 지역의 4개의 성장들을 대상으로 공포한 <라마의 정치 간섭 금지에 관한 문건[關於禁止喇嘛干政之件]>이라는 제목의 훈령이 그것이다. 즉 만주국이 건국되면서 몽고족 지역에서 성(省), 기(旗)의 행정단위를 설치하여 종교의 정치 간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만주정보소에서 편찬한 보고서 《만주의 종교》에 따르면, “라마 사원은 원래가 완전한 자치조직과 사법제도를 갖추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법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조직도 유명무실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만주국이 건국되고 난 후에 동북지역의 라마교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1934년 4월 28일에는 <승려, 도사의 탁발 일시 금지에 관한 문건[關於暫禁僧道化緣之件]>을 공포하여 승려들의 탁발이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어 1936년 8월 30일에는 <봉천성 사원 관리 조례[奉天省管理寺廟條例]>와 <봉천시 사원 등록 시행세칙[奉天市寺廟登記施行細則]>등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종교 통제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이 <조례>에서는 통해 불교와 도교, 라마교의 사원과 도장의 재산과 인력 사항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교육청의 조사를 받게 하였으며, 또한 사원들의 재정(수입과 지출)도 모두 교육청의 기준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세칙>에서는 사원에 소속된 승려와 도사, 라마의 원명, 법명, 나이, 본적, 종파, 출가 장소 등등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공포는 내용적으로 보면 당시 만주국내의 종교단체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를

문교부(민생부)의 통제 속에 두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종교 통제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

1938년 9월 24일에는 <사원 및 포교자의 일시 취소 규칙[暫行寺廟及布教者取締規則]>¹⁶⁾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는 만주국 시기 종교 통제의 중요한 법령으로 민생부 제 93호령으로 반포되었다. 일부 지역적 성격의 법령과 달리 이 <규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동된 법령으로 모든 종교와 종교단체, 그리고 주지, 승려, 도사, 신부, 목사 등 모든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규칙>의 내용은 종교 사원(사찰과 도관, 교회, 성당 등)의 설립과 합병, 그리고 이전과 폐지에 있어서도 그 원인과 종파, 기타 종교와의 관계, 건축물 관련 내용, 비용, 포교방식, 유지 방법, 그리고 모든 인력 사항 등의 구체적 내용들을 민생부에 보고한 후 민생부의 조사를 거친 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 활동에 있어서도 부동산, 토지, 심지어는 종교용 기물 등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고 현지의 행정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포교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분 조사를 거친 후 합격자에 한하여 신분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러한 모든 종교 활동들이 “공익”에 위배될 경우에는 포교 장소 자체를 폐지하고, 또 포교 행위가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교자의 포교 자격 자체를 박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목에 “일시[暫行]”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법령은 1945년 만주국이 멸망할 때까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1939년을 전후로 이 <규칙>과 관련된 일련의 법령들이 제정, 시행되어졌다.¹⁷⁾

2. 경찰력을 동원한 감시체제의 형성

만주국은 1932년 건국 이후 중앙부처의 하나로 민정부(民政府)를 두었고, 민정부 산하에 경무사(警務司), 경무사 산하에 특무과(特務科)를 두었으며 각

16) 康德五年九月二十四日, 民生部令 第九十三号.

17) 예를 들어 <布教者身分證明書發給規則>, <寺廟財産保管糾紛> 등.

지방에도 경찰청 산하에 특무과를 두고 있었다. 1937년 정부 조직 개편 당시에는 민정부를 민생부로 바꾸고 원래 군정부(軍政部)를 ‘민정부 경무사’로 합병하여 ‘치안부’를 만들고 특무과를 여기에 배속시켰다. 1943년의 전시체제에 따른 조직 개편에서는 치안부를 폐지하고 군사부와 경무총국을 새로 신설하였는데, 특히 경무총국은 국무원 총무청 산하 기관으로 국무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으며, 특무경찰의 직속 상위 기관인 특무처 특무과는 이 경무총국의 지시를 직접 받아 활동하였다.

만주국의 종교 감시기구로는 치안부 경무사의 특무과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만주국의 경찰 시스템에 있어서 대중들의 사상과 언론에 대한 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던 조직이 바로 이른바 “사상특무경찰”이었다. 이 ‘사상특무경찰’은 “사상적으로 국가 존재의 기초를 해치거나 국가의 발전을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보호하는 특수 경찰”¹⁸⁾을 말한다.

이러한 경찰 조직 중에서 특히 이목을 끄는 조직 중의 하나가 몽고족 거주 지역에 라마교 감시를 위한 두었던 흥안국(興安國)이다. 주지하다시피 라마교는 불교의 한 종파로 대다수의 몽고족들은 라마교를 믿고 있었으며, 종교적 특징상 라마교 지역은 정교일치의 사회로 이루어져 있었다. 흥안국은 1932년에는 흥안총서(興安總署)로 바뀌었다가, 1934년에는 ‘몽정부(蒙政部)’로, 다시 1937년에는 몽정부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배속되어 몽고족의 감시전담기관으로 활동하였다.

만주국은 이러한 행정 및 경찰 조직을 건국초기부터 각 민족의 종교 활동 및 종교단체들을 감시하였다. 특히 1935년에 특무기관에서는 제기한 이른바 ‘사상대책’ 계획을 보면, 그 중점 관리 대상 중의 하나를 “종교나 기타 단체의 명의를 빌어 반일 반만 공작을 하는 자”¹⁹⁾로 분명하게 명시를 해 놓

18) 偽滿洲國國務院質安部編, 1990, 《滿洲警察史》, 吉林省公安廳公安史研究室、東北淪陷十四年吉林編寫組翻譯(長春), 304쪽.

19) 傅大中, 1990, 《偽滿史叢書—關東憲兵隊》(長春, 吉林教育出版社), 89쪽.

고 있다. 1940년 5월의 <사상대책요강>의 ‘목표’ 조항에는 종교를 “반드시 주의하고 관찰해야할 목표”²⁰⁾라고 명시해놓고 있기도 하다.

우선, 일제는 만주국 건국 이후 각 종교계의 여러 협회와 단체들을 조직하게 하고 그 단체나 협회의 요직이 일본인 특무를 임명하였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의 경우, 동북지역이 일본의 수중으로 넘어 간 후 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얼빈과 자무스, 치이하얼 등의 교인들과 청진이사회[淸眞董事會]를 조직하고, 이사회 성원들은 대중들의 투표로 선출함으로써 대중들의 이익을 대변케 하고자 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제는 그 이사회 내부에 특무를 파견하기로 하고 1937년 5월 27일에 일본인 특무 혼다 세이지(本田誠二)를 파견하여 청진이사회의 ‘고문’으로 앉혔다. 하지만 특무 한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일제는 9월 1일에 다시 특무 이라오 계 지로(平尾繼次郎)를 ‘법률고문’ 자리에 앉히고 혼다 세이지와 함께 동북지역 이슬람교의 활동을 감시하게 하였다.²¹⁾

일제는 이슬람교 이외에도 천주교와 기독교 등 외국인 전도사가 운영하고 있던 교회나 단체에 대해서도 삼엄한 감시를 펼쳤다. 예를 들면, 1933년 11월 만주국협화회 중앙본부의 관원이었던 마츠카와 헤이하치로(松川平八郎)가 소팔가자촌(小八家子村)을 순시하다가 그 마을 주민들이 모두 천주교를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의심을 하게 된다. 이에 그는 표면적으로는 마을의 주민들이 신앙심이 깊고 순박하다고 하면서도 이 마을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점에 예의주시하게 된다. 그리고는 곧 이 마을을 모범마을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이 마을에 협화회의 분회를 설치한다. 그리고는 1934년 4월 로마의 교황청이 만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자 곧바로 국무원 총무청 차장 겸 협화회 중앙본부 차장이었던 사카타 키이치(阪谷希一)와 궁내부(宮內府) 예관(禮官) 장격(張格)과 국무총리 정효서의 아들

20) (中國)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合編, 1993,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偽滿憲警統治>(北京, 中華書局), 215~217쪽.

21) 程力, 2005, <偽滿時期日偽當局宗教統治研究>(東北師範大學 2005年 碩士學位論文), 8쪽 참고.

정우(鄭禹) 등과 함께 이 마을을 방문하여 시찰을 하고, 마을 교회당의 신부 염덕청(廉德淸)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이 마을을 ‘왕도낙도’의 모범마을로 지정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치안부 경무사는 마을의 ‘치안’을 명분으로 마을에 경찰 파출소를 설치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천주교인이 밀집되어 있는 마을이나 촌락에 이러한 방법으로 경찰 파출소를 설치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²²⁾

전체 만주국 통치 시기 동안 이 특무경찰들은 각 종교와 종교 단체에 대한 사상통제의 제 일선에서 활동하였으며, 특히 천주교나 기독교 등의 외래 종교 단체, 교회, 그리고 재만 조선인의 종교활동과 종교단체는 특무경찰의 주요 감시대상이기도 했다.

3. 종교협회(총회) 등의 조직을 통한 선전도구화

만주국은 종교제도의 확립을 위한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숫자, 사원의 경제 상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종교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한편 종교문제연구회 개최, 종교제도 심의회 설치, 각 종교계의 현(縣) 대표 좌담회 개최, 포교자 지도강심회 및 강연회 등을 계획하였다.²³⁾

1932년부터 1939년까지는 만주국 도교 발전의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일본과 만주국 정권은 이른바 ‘학자’, ‘승려’ 등을 파견하여 동북 지역 도교의 종교 활동을 세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1938년 9월에 <사원 및 포교자의 일시 취소 규칙[暫行寺廟及布教者取締規則]>를 공포함으로써 각 종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의 족쇄를 채우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국민의 다민족성을 기초로 건국된 만주국은 건국초기부터 이른바 ‘오족협화’를 통치 이념의 하나로 내세웠다. 만주국 국무원이 편찬한 <<강덕 7년 임시 국세조사 보고(康德7年臨時國勢調查報告)>>에 따르면 1940년 만주국의 총인구수는 43,129,968 명이었는데, 그 중에

22) 앞의 논문 참고.

23) 고병철, 2007, 『만주국의 ‘왕도낙도’ 구상과 종교』, 『한국민족사 연구』 50, 257~288쪽 참고.

서 중국계(한족, 만주족, 몽고족, 회족)의 인구가 36,870,978명이며, 이 중에서 한족이 중국계 인구의 90.2%, 전체 인구의 85.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인은 819,614명²⁴⁾, 조선인이 1,450,384명이었고, 대만인이 1,497명 뿐 이었다. 이처럼 만주국 내 일본인의 숫자는 오히려 조선인의 숫자보다 적었다. 비록 만주국의 일본인들이 상류사회를 구성하고 있었고, 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2% 정도에 불과한 일본인이 실질적으로 만주국의 민중들까지 지배하기는 쉽지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협화회’였다. 일제는 협화회를 통해 만주국의 종교계에 각종 단체 등을 구성하게 하여 체제 선전과 대중 교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1938년 관공군 사령부의 지시로 협화회 중앙본부에서는 대동불교회(大同佛敎會), 보화불교회(普化佛敎會) 등의 단체에 승려와 신도 60여명으로 이른바 ‘선무반(宣撫班)’을 조직하도록 하고 이 선무반을 통해 일본 관동군이 장백, 무순, 화진 등으로 들어온 후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항일대오와 접촉하지 말 것이며, 일본군에 협조해야 함 등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했던 경우이다. 또 1938년 당시 동북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봉천의 태청궁에서 “만주국도교총회”를 설립하고, 이듬해 39년에는 노자 서거 3262주년을 맞이하여 행사를 기획하게 되는데, 그 이튿날에는 ‘국운창용(國運昌隆)’을 내용으로 한 기도법회를 열고, 또한 일본과 만주군 사망자에 대한 위령제까지 지냈다.

1934년 7월 3일에는 ‘만주국이슬람교총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일본인 가와무라 광도(川村狂堂)를 총재에 앉히고 만주국 안동지구 경비사령관 왕전충(王殿忠), 신경특별시 공서교유과 과장과 북만철로경찰 제6단 단장을 명예 회장으로 앉혔다. 이러한 인사만 보더라도 이 “만주국이슬람교총회”가 어용단체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만주국 정권과 일제는 특히 협화회를 동원하여 각 종교계로 하여금 협회나 총회 등의 이름으로 어용단체를 조직하고서, 그 주요 직책에 일

24) 1944년의 통계자료를 보면, 일본인은 1,662,234명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본인을 내정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했다.

IV. 만주국과 불교

1. 만주국 이전 동북지역의 불교 전파와 발전

불교문화가 언제 동북지역으로 처음 전파되었는지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동북의 만주지역이 고대 고구려 땅이었음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서 고구려 17대왕인 소수림왕 2년(372년)에 전진(前秦)에서 전해졌다는 기록²⁵⁾을 참작하여 대략 불교의 전래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서는 또 소수림왕 5년(375년)에는 “초문사를 창건하고 순도를 두었으며, 또한 이불란사를 창건하고 아도를 두었으니, 이것이 해동 불법의 시초였다.”²⁶⁾라고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이 중국 만주지역(길림성 집안)에 집중되어 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승려들의 모습이나 불교 활동 등의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고구려가 불교를 수용하여 높이 숭상하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불교는 만주를 터전으로 살아온 여러 민족들에게 전파되어 발전해 나갔다. 남북조 시대와 당·송 시대를 거쳐 중국 불교의 발전과 함께 동북 지역의 불교 역시도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남북조 시기에는 제나라 고조 소도성(蕭道成)(427~482)가 건원(建元) 원년(479년)에 전당(錢塘) 영은산(靈隱山)의 고승 담초(曇超)로 하여금 요동지역으로 가서 널리 전파하기도 했다.²⁷⁾

요와 금나라 시기는 동북 불교의 최전성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요나라

25) 『三國史記』卷第十八「高句麗本紀」第六「小獸林王」: “二年, 夏六月, 秦王苻校勘 012堅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迴謝, 以貢方物.”

26) “五年. 春二月, 始創肖門寺, 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海東佛法之始”(『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小獸林王).

27) 《高僧傳·習禪》: “북제(北齊)의 태조(太祖)가 즉위하자, 칙명을 받고 요동(遼東)에 가서 선의 도를 도와 널리 폈다. 그곳에 머무는 2년 동안에 크게 불법의 교화를 행하였다(至齊太祖即位, 被勅往遼東弘讚禪道, 停彼二年大行法化).”

는 대장경을 간행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고려에까지도 전해지기도 하였다. 요나라 성종 야율응서(耶律隆緒) 개태 9년(1020년)에서부터 천조제(天祚帝) 천경 4년까지 요서지역에만 해도 90여 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²⁸⁾

청나라의 불교에 대한 보호정책과 함께 동북의 불교는 더욱 크게 흥성하였다. 특히 청나라 때는 장전불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장전불교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청 강희 8년(1669년)에 처음으로 짓기 시작하여 35년에 걸쳐 완성된 서응사(瑞應寺)는 동북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라마사원으로, 한때 전성기 때에는 라마승의 수가 3600명에 달했다고 한다.²⁹⁾

청나라 건륭제 시기 이후에 동북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자 가경제 때부터 국경봉쇄가 점차 느슨해지기 시작하다가 咸豐 11년(1861년)에는 국경봉쇄령을 완전히 해제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동북지역 불교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동북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은 동북지역의 종교, 특히 불교 전파에 좋은 사회적인 환경을 형성시켜 주었다. 특히 중국의 혼란한 사회적 현실로 인해 이 시기의 불교는 기복적 성격을 중심으로 동북 청나라 경내로 유입된 유민들에게 널리 전파되어 나갔고, 사찰들의 신도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사찰들이 건립되는데, 도통 3년(1911년) 길림성에만 하더라도 사찰 수가 150여 개에 이르렀다.

특히 민국시기에는 일반 하층 민중들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일부 지역들은 동네 이름을 사찰 명칭을 따서 짓기도 했는데, 요녕성의 35개 시와 현의 농촌 마을 중에서 대략 149개의 마을이 그 지역의 사찰명을 마을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한다.³⁰⁾ 동네 이름을 사찰명으로 불렀다는 사실은 당시 불교가 얼마나 민중 속으로 들어가 있었는지를 잘 말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잘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8) 《遼寧省志·宗教志》(遼寧省地方志編纂委員會編, 遼寧人民出版社, 2002), 48~50쪽 참고.

29)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2000, 《吉林省志·宗教志》(長春, 吉林人民出版社), 53쪽 참고.

30) 遼寧省地方志編纂委員會, 2002, 《遼寧省志·宗教志》(沈陽, 遼寧人民出版社), 57쪽 참고.

1925년부터 1931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면, 길림성 5만여 가구 중에서 위로는 성장이나 청정 등의 고위관료에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관음을 모시고, 집집마다 아미타를 염불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동북지역에 불교가 상류계층 뿐만 아니라 하층의 일반 민중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었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처럼 동북지역에는 고구려시대 불교가 처음으로 전래된 이후 매우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상류 사회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들의 일상생활 속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만주국 시기 동북지역 불교 개황

만주국 시기 동북지역의 불교(한전불교)의 특징 중의 하나는 종파관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천태종, 정토종, 화엄종, 선종, 유식종, 삼론종, 율종, 밀종의 8대 종파가 있었지만, 대부분 명확한 구분이 없이 여러 종파가 혼재해 있었다. 만주국 시기 불교의 종파 의식은 다만 사원의 전통적 분류상 그리고 승려들의 계보 상으로만 일부 존재할 뿐이었다.³¹⁾

지역별로 살펴보면, 당시 만주국의 수도였던新京市에서는 천태종이 가장 성행하였다. 특히新京市에는 반야사(般若寺)가 있었는데, 반야사는 당시 만주국 불교계에서 가장 큰 사찰의 하나로 원래는 천태종 제 44대 종사인 담허(談虛) 종사³²⁾가 창건하였고, 이후에 만주국 시기에는 제자인 주배(澍培)법사³³⁾가 주지로 있었다. 주배는 만주국불교총회의 회장을 맡고 있기도 했다.

31) 長春文史資料編輯部, 1998, 《長春文史資料》(長春市政協文史委員會), 98쪽; 和琴, 2013, <偽滿洲國漢傳佛教基本狀況研究>(《學理論》, 第6期)에서 재인용.

32) 1875년생, 속성은 왕씨이고 이름은 복정(福庭)이었다. 중년에 출가하여 천태종 고승 채한(諦閑) 법사에게서 수학하였다. 이후 1925년 천태종 제 44대 종정에 오른다. 1921년부터 10여 년간 하얼빈의 극락사, 장춘의 반야사, 영구(營口)의 능엄사를 창건하였고 또 심양의 반야사, 길림의 관음고찰 등을 중건하였다. 이 기간에 주배법사와 인연을 맺게 되어 이후 천태종 종정의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1963년 7월 11일 홍콩의 흥법정사에서 세수 89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33) 1894년 생. 몽고족으로, 요녕성 조양현(朝陽縣)이 본적이다. 16세 때 금주 비로사에서 흥관 노화상에게서 삭발하고 출가하였다. 1920년, 24세에 심양의 만수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반면에 길림성 지역에서는 진언종, 화엄종, 천태종, 정토종, 선종 계열의 임제종 등이 두루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선종이 가장 성행하였다. 그중 임제종 사찰이 219곳, 승려가 643명이었고, 선종 사찰이 38곳, 102명의 승려, 조동종이 46곳의 사찰에 111명의 승려가, 정토종은 11곳의 사찰에 승려 79명이, 비로종은 22곳의 사찰에 42명의 승려가, 진언종은 16곳의 사찰에 승려 44명이, 천태종은 17곳의 사찰에 승려 193명이 있었으며, 그 밖의 종파가 불분명한 사찰이 65개소에 승려가 21명이 있었다.³⁴⁾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종파로 비로종이 있었다. 비로종의 전체 명칭은 ‘금정비로종(金頂毘盧宗)’으로 선종계열의 종파로 동북지역의 특유의 불교 종파이다. 비로종은 그 기원을 남조의 제량 시기 보지(寶志) 선사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에서 비로종의 승중(僧衆)의 수는 많지 않지만, 청대 중엽이후부터 동북지역에서 크게 성행했던, 동북지역 특유의 종파라고 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만주국 시기 요녕 지역에는 비로종 사원이 133개 사찰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조동종 사찰이 62개소, 임제종은 55개, 정토종은 110곳의 사찰이 있었음³⁵⁾과 비교해 보면, 당시 비로종의 교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많은 불교종파 중에서도 유독 법상종(유식종 또는 자은종)은 동북지역에서 그다지 크게 성행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만주국의 제 3차 《문교연감(文敎年鑑)》에는 법상종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고, 4차 《문교연감》에도 자은종 사찰은 1곳, 승려 1인, 신도 16명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만주국 불교와 도교의 혼재 현상은 사찰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1921년 불학원에서 담허법사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불학원 졸업 후 비로사로 돌아갔다가 1925년에 담허법사의 북경의 백림사의 요청으로 가던 도중 금주를 지나다가 금주 비로사의 은사 홍관 노화상의 추천으로 담허와 함께 북경으로 가게 되었고, 이후 담허법사가 북경에 세운 “미륵불학원”에서 다시 3년간 수학하게 된다. 이후 북경 보제사의 불학원에서 교무주임의 소임을 3년간 맡아보게 된다. 담허법사와의 인연으로 1931년 제45대 천태종 종정에 오른다. 1986년 12월 8일 장춘의 반야사에서 세수 91세, 법랍 75세로 입적하였다. 생전에 길림성 불교협회장, 장춘 반야사 방장, 길림성 정협위원을 역임하였다.

34) 王佳, 2016, <東北佛教金頂毗盧派的歷史傳承和發展>, 《宗教學研究》, 第3期 참고.

35) 앞의 논문 참고.

일반적으로 “옥황대제, 천제묘, 산신묘 약왕묘, 감리궁 등의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도교 계통의 사원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불교 사원들이며, 불교 승려들이 관리하는 사원이다. 일반 민중들은 도교 계통의 신, 예를 들어 감리(일월신)을 보살로 생각하고 관제(關帝)를 여래나 보살, 또는 나한으로 생각했다. 그 결과 도교와 불교가 뒤섞여 버렸다.”³⁶⁾ “길림성의 불교 사원은 대부분이 사찰명을 수도의 체계를 모방했다. 그리고 대웅전의 좌우에 도교의 신들을 모셔놓고 석가모니 불상은 반대로 작은 규모로 주지가 거주하는 조용한 공간에 모셔”³⁷⁾ 두기도 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첫째 당시 승려들의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그리 높지 않았던 탓이기도 하다. 1937년 만주국 민생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불교 승려 수는 5114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자료에서는 승려의 자질은 논하면서 “대다수의 승려들은 불교(의 교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으며 불교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 단지 형식적으로 불경을 외우거나 장례식에서 불사를 할 뿐, 불교 진흥이나 중생 구제의 기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심지어 일부 승려는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이었다고 서술되어 있다.³⁸⁾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민중들에게 있어서 당시 종교의 의미는 신행(信行)이 아니라 기복(祈福)에 있었다는 점이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현실 상황에서 민중들은 현실적 이익에 따라서 종교를 신봉했고, 단지 종교에 의지하여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중들에게는 불교의 교리나 도교의 교리의 차별성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불교의 부처나 도교의 제신(諸神)이 모두 같은 “신”에 불과했던 것이다.

승려들의 낮은 문화적 수준과 신도들의 기복성이라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만주국 시기의 불교는 만주국 정권과 일제에게는 체제 선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이용가치가 높았다. 당시의 신흥 종교나 외래종교인 기독교나 천

36) 앞의 책 《長春文史資料》, 22쪽.

37) 앞의 책 《長春文史資料》, 18쪽.

38) 앞의 책 《長春文史資料》, 22쪽.

주교가 일제에 대한 강항 반항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강력한 탄압을 받아야 했던 반면, 불교는 일제에 대한 큰 반항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주국 정권과 일제의 도움으로 교세를 떨칠 수 있었고, 일제는 한편으로 이러한 불교를 이용하여 당시 민중들의 반일 정서를 와해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3. 만주국 시기의 불교 정책

만주국 시기 동북지역에는 불교 뿐만 아니라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등 매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는 만주국 시기 동북지역에서 불교는 대중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였으며, 비단 장전불교(藏傳佛教) 뿐만 아니라 한전불교(漢傳佛教)도 폭넓은 대중의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滿洲國各教別統計表 (滿洲國統計年報第十一年度出版)

政 別	信 徒 數	布 教 者 數		信 徒 數	信 徒 數	信 徒 數	備 考
		男	女	計	男	女	
佛 教	11,012	11,012	—	11,012	11,012	—	
喇 嘛 教	1,012	1,012	—	1,012	1,012	—	
道 教	1,012	1,012	101	1,113	1,012	101	
天 主 教	1,012	1,012	101	1,113	1,012	101	
基 督 教	1,012	1,012	101	1,113	1,012	101	
總 計	14,048	14,048	101	14,149	14,048	101	

(本表係根據滿洲國統計年報第十一年度出版)

위의 표에서도 보듯이 여러 종교 중에서도 포교사(종교인)나 신도 수에 있어서 불교의 승려와 신도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차이가 월등했음을 잘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만주국 시기 동북지역에 있어서 여러 종교 중에서 불

교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국 정권과 일제는 동북지역의 불교계와 그 활동을 예의주시하였으며, 또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고 각종 법령을 제정하여 불교를 통제하고 개조하고자 했다.

만주국과 일제의 종교 탄압 속에서도 불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특히 불교의 중요한 행사에는 당시 만주국 정권의 지도층과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참가하기도 하면서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다.

1936년 당시 사회적으로 꽤 알려진 승려 주배(澍培)가新京市(新京市, 지금의 장춘)에서 법회를 열자, 만주국 황제 부의가 친필로 ‘정각구족(正覺具足)’이라 써서 계단(戒壇)의 편액을 하사하였으며, 총리대신 장경혜(張景惠)도 ‘수계위원회(傳戒委員會)’ 회장직을 맡아 수계 활동을 주재하였다.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당시 만주국에서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장경혜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의 요직을 맡고 있던 여영환(呂榮煥), 손기창(孫其昌), 우정도(于靜濤), 장해봉(張海鵬) 등도 사찰을 자주 드나들던 단골이었으며, 당시 전국의 크고 작은 사찰들의 편액이나 비명(碑銘), 대련 등에 이러한 만주국 주요 인사들의 친필이 매우 많았다.³⁹⁾ 특히 당시 만주국의 황제 부의는 자신 스스로 불제자로 자처하기도 했다.⁴⁰⁾

대동 원년(1932년)에는 재정부에서 거액을 출자하여新京市의 반야사(般若寺)를 중건하기도 했다. 반야사 중건 후 일제는 원래 반야사의 이름 앞에 ‘호국’이라는 두 글자를 갖다 붙였는데, 이는 당시 만주국에서 불교를 제창했던 정치적 목적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제나 만주국 정권이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비록 그것이 기만전술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불교의

39) 郭振興, 1982, <偽滿洲國佛教概說>, 《社會科學戰線》 第二期.

40) 특히 당시 만주국의 황제 부의는 불교를 매우 심취하여 침궁에 불감(佛龕)까지 설치해 놓고 있었으며, 매일 불경을 읽고 염불을 할 정도였다고 하며, 그래서 그가 만주국 황제 신분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하였을 때 일본은 ‘고려대장경’을 선물하기도 했다.

교세 확장에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1937년 동북지역의 불교 사찰 수량은 이미 2130여 곳에 달했으며, 이 수치는 역대 최고를 기록이며, 승려의 수 또한 가장 많을 때에는 4만 여명으로, 이는 “9.18”사변 당시의 20배가 넘는 수치였다.⁴¹⁾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교를 적극 제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다민족성을 기초로 건국된 만주국은 건국초기부터 이른바 ‘오족협화’를 통치 이념의 하나로 내세웠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40년 만주국의 총인구수는 43,129,968 명으로, 그 중 일본인은 819,614명⁴²⁾이었으며, 이는 당시 전체 인구의 2%도 되지 않는 숫자였다. 비록 만주국의 일본인들은 만주국 국민의 구성원 중 최상의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2%도 채 안 되는 일본인들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만주국의 민중들까지 지배하기는 쉽지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협화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협화회는 종교를 통해 국민들을 감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당시 가장 많은 인구가 신봉하고 있던 불교를 협화회 밑에 두고 체제 선전 및 민중 감시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1933년 일본 천태종의 승려들이 하얼빈의 극락사를 방문하였는데, 이때 신경의 반야사와 하얼빈의 극락사에 일본 승려를 파견하여 상주하게 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에 극락사 방장 여광은 동의하게 된다. 신경의 반야사와 하얼빈의 극락사는 당시 동북지역 불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이었다. 비록 종교 교류의 명목으로 일본 승려의 상주시키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불교계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에서 신경 반야사에 파견했던 츠즈키 겐묘(都築玄妙)는 승려 신분 이외에도 일본 불교 천태종의 총무청 비서였으며, 하얼빈 극락사에 파견했던 이마이 아키요시(今井昭慶)는 일본 관동군 사령부의 특무였다. 통계에 따르면, 만주국 시기에 일

41) 앞의 논문 참고.

42) 1944년의 통계자료를 보면, 일본인은 1,662,234명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본에서 파견되어 만주국의 큰 사찰들에 상주했던 일본인 승려는 모두 20여 명에 달했고, 이들을 통해 일제는 동북지역의 주요 사찰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것이다.⁴³⁾

1936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만주국 “전국불교좌담회”를 개최되었는데, 이 좌담회의 주요 의제가 바로 만주국의 수도新京시에 ‘불교총회’를 설립 하고, 전국의 사찰과 승려들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 좌담회는 만주국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회의로, 특히 일제의 동북지역 종교 상황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의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1939년에 이르러 마침내 ‘만주국불교총회’가 정식으로 성립되는데, 당시 만주국불교총회의 결성 목적을 “건국 정신과 결합하여 불법을 전파하고, 민족 단합과 국운의 창성을 목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지도와 배양, 교리와 교의, 제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며, 민중을 교화하고 배공(排共)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 ‘만주국불교총회’를 통해 일제와 만주국 정권은 민중에 대한 사상교화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만주국불교총회’의 회장과 제1부회장은 명의상으로는 여광(如光)과 주배(澍培) 두 만주국 승려가 맡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부회장인 일본인 정객(政客)인 기궁지이(岐宮智頤)와 일제에 간섭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당시 하얼빈에는 13개의 사찰이 있었는데 그 중 7개 사찰의 주지가 일본인 승려가 맡고 있었으며,新京의 ‘호국’ 반야사에도 이른바 불교 대사(大使)라는 이름으로 일본인 승려 츠즈키 겐묘(都築玄妙)가 상주하고 있었다.

또 1938년에는 관공군 사령부의 지시로 협화회 중앙본부에서는 대동불교회(大同佛敎會), 보화불교회(普化佛敎會) 등의 단체에 승려와 신도 60여명으로 ‘선무반(宣撫班)’을 조직하도록 통보했다. 이 선무반은 일본 관동군이 장백, 무순, 화전 등으로 들어온 후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항일대오와 접촉하지 말 것 등을 선전하는 도구로 활약하였다.

이처럼 만주국 정권과 일제는 만주국협화회를 중심으로 일제는 만주지역

43) 程力, 2005, 《偽滿時期日偽當局宗教統治研究》(東北師範大學 2005年 碩士學位論文), 7쪽 참고

불교계 및 불교 단체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선전활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한편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V. 결론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만주국은 신생독립국가의 형식으로 일제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지배되었던 신 식민지 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제는 이 신생의 신식민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종교를 수단으로 삼았다. 종교에 대해 한편으로는 우호적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지만, 그 본질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선전의 도구이자 수단이었다.

만주국은 이른바 ‘왕도정치’와 ‘민족협화’를 건국 이데올로기로, 예교 - 공교를 국교로 내세우며 종교국가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유교는 만주국이라는 신생 독립국가에서 국교로 부활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살펴보면, 만주국의 ‘왕도정치’는 일제가 내세운, 동아시아의 전통을 기반으로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국민들을 충효의 논리로 통제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제공되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른바 왕도정치는 황도정치로 변질될 수 밖에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종교국가 만주국으로서의 모습을 조명해보고, 또한 식민지 국가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불교 정책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본질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종교 정책에 있어서도 만주국 정권과 일제는 법령의 제정을 통해서 손발을 묶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특무와 경찰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또 만주협화회를 통해 어용단체들을 조직하여 국민들을 교화하고 체제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다른 종교들이 억압받고 통제를 받았던 반면, 불교는

만주국 시기에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그 이면에는 동북지역이라는 특수한 역사 공간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던 특수한 상황들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동북 불교의 특수성은 일제에게 이용당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불교는 만주국 시기 일제의 종교를 통한 만주국 통치의 핵심 수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주국 정권과 일제는 종교라는 탈을 쓰고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억압하고 통제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만주국 시기 불교의 표면적인 발전의 배경과 그 속에 드리워져 있었던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 비록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종교만이 이용당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高木翔之助 著, 소화 6년(1931년), 《滿蒙獨立建國論》, 동경: 국민외교협회 발행
 偽滿洲國國務院文教部編, 1934, 《滿洲國文教年鑒》, 長春: 國務院出版部
 偽滿洲帝國協和會編, 1940, 《滿洲帝國協和會組織沿革史》, 東京: 不二出版社
 程力, 2005, 《偽滿時期日偽當局宗教統治研究》, 東北師範大學 2005年 碩士學位論文
 閔超, 《東北淪陷時期宗教狀況与教化統治研究》, 東北師範大學 2009年 博士學位論文
- 武强 主編, 1989, 《東北淪陷十四年教育史料》(吉林教育出版社) 第一輯
 偽滿時期資料重刊委員會編, 1990, 《偽滿洲國政府公報》 第一冊, 北京: 新華書店
 傅大中, 1990, 《偽滿史叢書-關東憲兵隊》,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偽滿洲國國務院治安部編, 1990, 《滿洲警察史》, 長春: 吉林省公安廳公安史研究室、東
 北淪陷十四年吉林編寫組翻譯
 王承祿·孫繼武 主編, 1991, 《中國東北淪陷十四年史綱要》,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中國)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合編, 1993, 《日本帝國主義
 侵華檔案資料選編-偽滿憲警統治》, 北京: 中華書局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2000, 《吉林省志·宗教志》,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遼寧省地方志編纂委員會編, 2002, 《遼寧省志·宗教志》,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 郭振興, 1982, <偽滿洲國仏教概説>, 《社會科學戰線》, 第二期
 王佳, 2016, <東北佛教金頂毗盧派的歷史傳承和發展>, 《宗教學研究》, 第3期
 한석정·임성모, 2001, 「쌍방향으로서의 국가와 문화」, 『한국사학회』 35(3)
 최봉룡, 2004, 「‘만주국’의 종교 정책과 재만 한인의 신종교 활동」, 『종교연구』 36
 프라센지트 두아라(Prasenjit Duara), 2005, 「제국주의와 민족국가: 일본과 만주국」, 『만
 주연구』 2.
 고병철, 2007, 「만주국의 ‘황도낙토’ 구상과 종교」, 『한국민족사 연구』 50.
 최봉룡, 2010, 「만주의 종교정책에 대한 연구: 국가종교와 국가이념의 변형을 중심으로」, 『승실사학』 24.

투고일 : 2019년 04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4월 24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4월 24일

■ Abstract ■

Religious Policy and Buddhism in Manchukuo

Lee, Geing-Min (Dong-A University)

In this paper, I provide an alternative reading of colonial Manchukuo as a religious nation and re-interpret the effects of Japan's religious and Buddhist policies used to control Manchuria.

Manchuria ruled itself and the Northeast region for about 14 years (after the Japanese Kwantung Army took over Manchuria in 1931) until the fall of the Emperor Pu-Yi on August 18, which took place soon after Japan's 1945 defeat.

The Manchuria that ruled during this time displayed signs that promoted "freedom of religion" as a national ideology of the "royal road," and religion as the "official school of Korea." They also nakedly displayed Japanese intentions to oppress with the use of "Usage" and "repression" on such signs. Japan used Manchukuo as an administrative organ of the state, similar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Social Welfare,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even as a bridge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lso, in this capacity, religion served to justify and propagate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Manchukuo during this time.

As a form of social consciousness, religion significantly impacted people at that time. Japan used religion as an essential coercive tool of colonial policy implementation to control and oppress the Manchukuo people. Japan's use of religion dramatically departs from the typical colonial accounts of Manchukuo.

Key words : Manchukuo, religion policy, Ritualism-Confucianism, association of five-nation concord, Manchurian Buddhism